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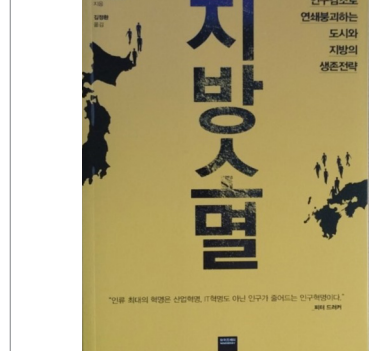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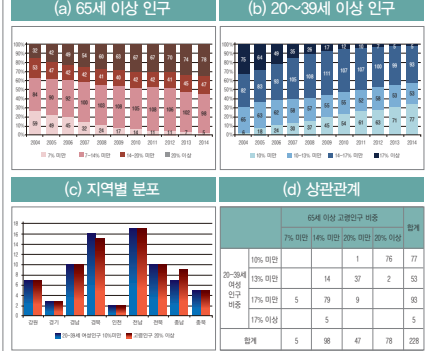
국내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은 2011~2012년 시작되어 2016년 정점으로 점차 확산 중

- 국내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지방소멸(마쓰다 히로야, 2014)에 관한 연구 이후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한국고용정보원, 2016), 행정안전부 주재의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및 인구감소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한국의 지방소멸 2018(한국고용정보원, 2018)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안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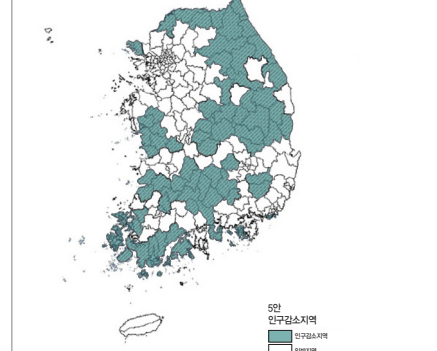
〈마쓰다 히로야 ('14)〉



〈한국고용정보원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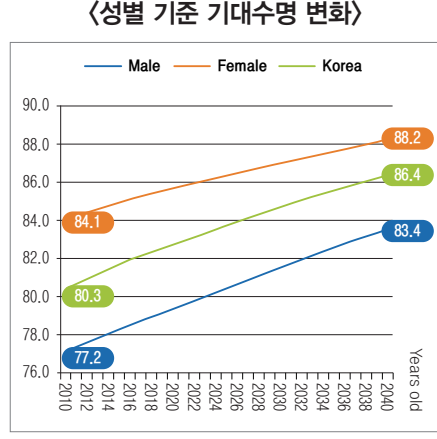


지역대상 인구변화 관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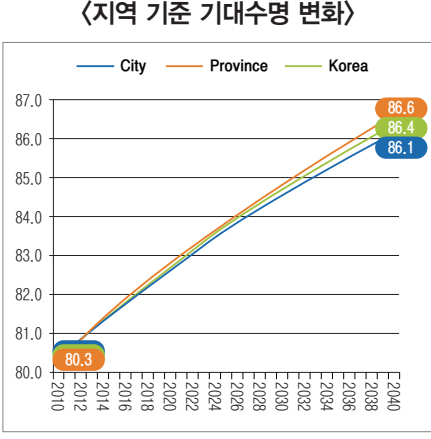
반면, 인구변화의 근본적인 쟁점사항은 기대수명의 증가이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안을 병렬구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인구변화를 단순히 인구감소로만 제시하였으며, 인구 증가 및 유입에 대한 차별적인 방안에 대한 유인책만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국외의 경우 인구변화를 기대수명 연장, 연령별 인구의 변화, 생산인구의 변화 등으로 이해하여 타 지역경제 구성요인과의 연계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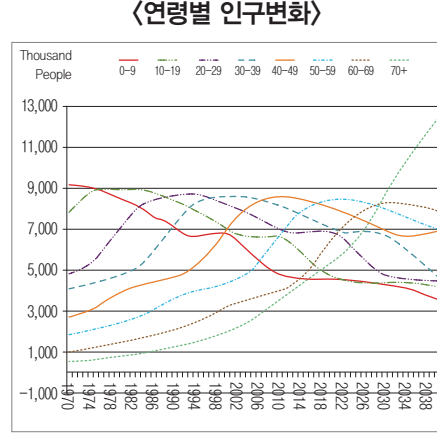
〈성별 기준 기대수명 변화〉



〈지역 기준 기대수명 변화〉



〈연령별 인구변화〉



인구변화의 주요 쟁점

더불어 인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의 인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함
- 반면, 근래까지의 인구계획은 지역특성을 통해 사회적인 인구가동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인구의 과다계상을 하는 것이 의례적인 관례로 사용된 점이 최근 강조되고 있음

지역의 인구변화 관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인구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s://www.betterfuture.go.kr>)의 아이와와 시간확보, 참여하는 육아, 공동 육아 및 돌봄, 여성의 일자리확충, 청년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적여건 조성 등의 사업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제공 형식으로 운영

인구변화를 대비한 중앙부처 사업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사업으로 양분되어 운영되며,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인구감소는 저출산 사업에 비해 지역적인 측면을 강조

- 반면, 인구감소와 저출산 사업에 대한 맥락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구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세대간 변화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어 있어 젊은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예산지원 사업에만 의존

인구변화에 대한 광역 수준의 사업은 지역의 인구구조 및 인구변화의 방향성을 제시

-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변화 요인을 출생, 사망, 순이동에 기반하여 장기 예측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로 제시하고, 세부 추진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로 설정

지역 단위의 최소단위로 구분되고 있는 시군구 기초를 대상으로 한 인구 정책 역시 인구변화에 대한 추세 도출, 정책 부문별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운영

- 중앙 및 광역에서 설정한 방향성을 참고하여 운영하는 유사점과 지역별 특성을 토대로 추진 방향을 세부적으로 도출하는 차별성이 병렬로 운영되고, 기초의 경우 읍면동 세부 단위로의 인구정책을 운영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인구정책은 읍면동 단위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단위가 상대적으로 시험적이라 시군구 기초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읍면동 단위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인구변화 관련 사업

중앙 지원		광역	기초
인구감소	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보조(음성), 북한이탈주민 귀농정책서비스(강진), 부모-지자체 공동육아(영양), 정주여건 개선(예산), 주거용마을(고창), 동네레지던시(정읍), 도시민턴(하동), 귀촌문화(합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위원회 운영(경기), 대학기업연계(충북), 원스톱돌봄(세종), 다자녀지원(강동), 지역거점돌봄(남원), 출산양육친화공간(울산), 찾아가는서비스(시흥), 산후조리원지원(삼척), 공동돌봄나눔터(광양), 기업연계출산장려(문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파악 • 정책별 세부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기업환경, 베이비부머 지원, 도시균형발전, 생활안전 • 공간적 차별화된 인구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현황 분석 • 관련계획 • 인구비전 설정 • 정책별 세부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정주여건, 관광, 은퇴자, 일자리, 인구유입, 귀농귀촌, 교육

장기발전계획과 차별된 인구계획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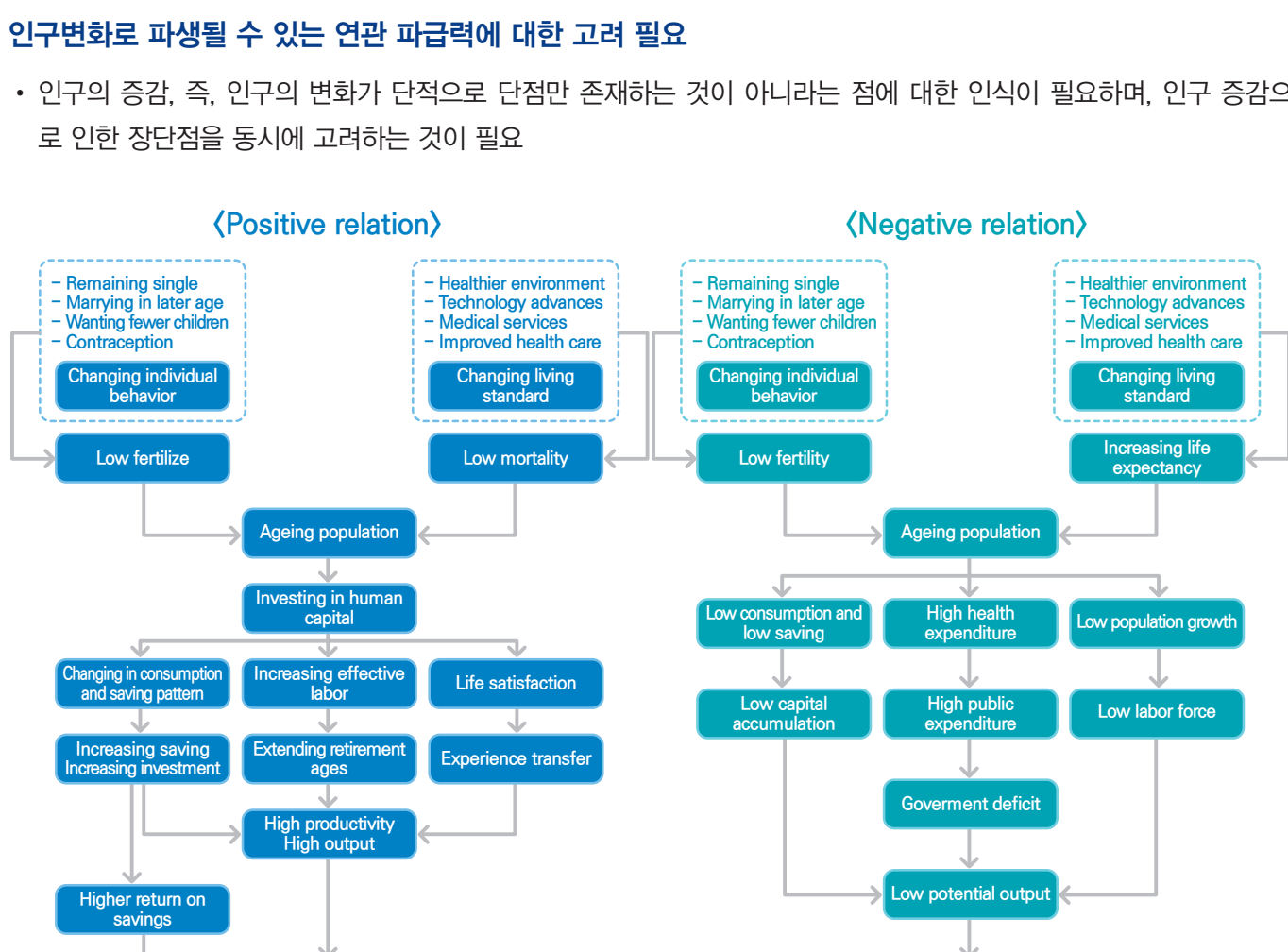
- 지역에서의 장기발전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예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인구에 대한 예측은 수율을 도출하는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함
- 장기발전계획은 수요에 대한 판단 후 수요 대응 시설 및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인 반면, 인구계획은 주변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추세 파악 후 이들의 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관계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장기발전계획과 인구계획은 동일하게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상호간의 관계는 역방향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궁극적으로 둘간의 관계가 점근하는 안정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추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필요성이 존재함

출산가능계층 맞춤형 정책 제공 필요

- 출산은 개인의 행복 증대 및 효용이 증가하지만, 직접 출산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기회비용의 증대, 남성의 경우에는 조력을 통한 기회비용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외에 기존 서비스의 확장만 논의

인구변화로 파생될 수 있는 연관 파급력에 대한 고려 필요

- 인구의 증감, 즉, 인구의 변화가 단적으로 단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인구 증감으로 인한 장단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



인구변화로 파생될 수 있는 장단점

효과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 방안

인구(수) 및 인구예측이 기본이라는 인지 제고 필요

- 인구와 기타 정책 및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과는 차별적이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인구의 변화는 지자체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 증대의 원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이 견인되며, 이는 다시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게되는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순환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지역숙원사업 해결만이 인구정책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확산 필요

-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인구의 자연증가 및 사회적증가를 위한 핀포인트 차원의 환경조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히, 단기적인 인구향상을 위해 지역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

지금 현재 및 단체장 임기내 인구 증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지 필요

- 인구와 관련된 사업은 당장 시작해도 늦은 사업이라는 이해 필요
- 즉, 인구사업의 목적은 출생 후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
- 이러한 사회적 증가에 대한 방안은 인구감소의 상쇄측면으로 반영 가능

지역별로 차등화된 인구감소 상쇄요인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

- 대표적인 인구감소 상쇄요인은 생산성 변화 및 인구가동이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대안 제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 상쇄요인을 반영한 사전적인 효과제시 필요
- 더불어, 인구 감소를 통한 장래 생산인구의 감소는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지원의 원천자원(resource)이 고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 및 대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

지역의 인구정책위원회의 협업 추진

-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식 또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의 긍정적인 활용으로 장기적인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의 과감한 용단 필요

중앙부처의 인구관련 정책사업과의 매칭 증대

- 한정된 지역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에서 운영 중인 사업과 매칭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의 방향성과 일치된 사업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인구 증대 및 확보를 위한 지역 사업 창출 필요

인구계획은 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종합계획으로 추진이 필요

-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자연인구증가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연관 서비스의 향상 및 증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출산률만 제고하는 정책은 개인의 효용차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장기 인구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

▶ 내용문의 :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skpark@krila.re.kr, 033-769-9891)

자료를 보기 :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재투자법의 필요성(여효성 수석연구원) [원문보기 >](#)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